

'91년도 통신정책 방향

李 寅 學
(체신부 통신정책국장)

■ 차 례 ■

- ① 글머리에
- ② '90년대 통신 정책 방향
- ③ '91년도 역점 추진 계획
 - 1. 첨단기술 개발과 산업화 촉진
 - 2. 통신산업 육성
 - 3. 공중통신사업 활성화
 - 4. 이용자 보호강화 및 제도정비
 - 5. 국제협력 활동강화
 - 6.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제도 및 기반 정비
- ④ 결 어

① 글머리에

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통신을 둘러싼 국내외의 환경은 급속도로 바뀌고 있으며 통신관련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통신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다.

먼저 우루과이라운드(UR) 다자간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통신서비스 교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경쟁을 통하여 통신사업의 발전을 가속화 시키기 위하여 지난 해에 국제전화사업과 정보통신사업에 경쟁을 도입하였다.

또한, 통신요금제도를 개선하고 통신요금 수준을 대폭 인하하여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정보통신 이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PC 단말기 1,000만대 보급계획의 일환으로 국민학교 교육용 컴퓨터의 보급도 시작하였다.

그밖에 정보통신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확대, 대북방 통신교류 증진, 국가기간전선망 사업추진 등 통신분야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통신을 둘러싼 국내외의 환경변화가 더욱 빠르고 폭넓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대내외적인 통신시장 참여욕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통신서비스 시장 개방이 가속화 됨은 물론 세계 각국간에 정보통신기술에 있어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되리라고 여겨진다.

또한, 정보사회 진입에 따라 정보통신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 고도화되고 정보통신 부문이 국민경제발전의 핵심전략분야가 될 것이다.

이러한 통신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80년대에 이룩한 통신부문의 발전을 가속화 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정책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최근 정보통신이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자연독점성이 약화됨에 따라 이 분야에 참여하려는 외부의 욕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우리의 나갈 방향을 성립하고 통신의 발전을 가속화 시켜 2000년대 "정보사회 구현"을 통한 풍요로운 복지국가의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 산업계는 물론 학계에
몸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
여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2] 90년대 통신정책 방향

정보·통신의 고도화를 통한 복지통신의 구현
을 위해 기본적인 통신수요인 전화에 있어서는
전국 즉시가설, 전국자동화를 '87년에 완성하였으
므로 기본통신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차량전화와 컴퓨터통신 등의
새롭고, 다양한 통신서비스의 수요도 적기에
충족되도록 정보·통신의 고도화를 꾸준히 추진
할 예정이다.

또한 통신사업의 경영체제는 '80년대의 서비스
별 독점체제에서 '90년대에는 적당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통신서비스사업 전반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면서, 소비자 가격도 인하하고 서비스 품질
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통신서비스사업의 기반인 통신설비가
낮은 가격에 질 좋은 국산제품이 공급되도록 정보·
통신 산업을 육성하고 전전자교환기, 전송장
비, 통신단말기, 위성통신설비, 반도체, 컴퓨터,
S/W 등의 첨단기기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촉진
시켜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장규모나 부가가치에서
중요성이 점증하는 정보통신 S/W 산업이 조기에
육성될 수 있도록 통신사업체의 S/W 수요
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제값을 주고 살 수 있도
록 하며 유통센타를 확대하여 유통기능도 지원하
는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또한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통신단말
기의 수출증대, 전전자교환기의 수출산업화를
본격화하고 해외 통신사업체의 국내 진출에 대응
하여 국내 통신사업체의 해외 통신시장 진출을
통신의 Global화에도 적극 대응하여 나가겠다.

그리고 정보통신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여
시장규모 증대와 고급인력 수요에 선 대비하여

나감으로서 통신을 통한 교통대체, 에너지절약을
촉진하고 통신산업이 지역균형발전, 사회적 형평
의 달성에도 기여하도록 하여 제조업 경쟁력
향상은 물론 산업전반에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
시켜 나가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7대 통신 선진국 진입을 '90년대
목표로 하여 통신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나갈
예정이다.

3 '91년도 역점 추진계획

1. 첨단기술 개발과 산업화 촉진

정보통신기술은 21세기 정보사회의 핵심기술로
선진국 진입에 필수적이며 고부가가치, 자원절약
형 산업기술이다.

이는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고급인력이 풍부한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한 최첨단기술이나
미·일 등 선진국간에 개방경쟁이 치열할 뿐
아니라 최근에는 기술이 전 기피현상까지 일어나
고 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현재 수준은 외국기술의
모방, 개발단계에서 소화, 흡수단계로 전진되고
있으나 앞으로 기술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기
위해서 원천기술의 개발을 서둘러야 할 단계이
다.

앞으로 기술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성공가능성 있는 중점 추진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개발함으로써 선진 기초기술 및 생산기술을 확보
하여 나가겠다.

이를 위해 개발비가 막대하거나 위험부담 때문
에 민간이 개발을 꺼려하는 기초기술과 대형
복합기술은 정부가 개발을 주도하여 나갈 것이
다.

'91년에는 지난 해 보다 38% 증가된 1,840억원
의 기술개발비를 투자하여

-10만회선급 대용량 전전자 교환기(TDX 10)
의 상용화

-초고속집적 반도체인 16M DRAM 실용 시제품
개발과 64M DRAM 기초 동결기술 개발

-행정전산망 주전산기(II) 실용 시제품 개발완
료 및 상용화

-고선명 TV(HDTV) 전송기술 개발

-통신·방송위성 개발

-디지틀 이동통신시스템 개발등

주요 핵심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교환기, 반도체, 컴퓨터등
정보통신 핵심기술을 제조업체에 전수하고, 제조
업체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해외특허정보 기술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정보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즉, 대형 시스템기술은 개발 초기부터 산·
학·연이 공동연구하고 단말기기 등 소형기술은
연구소에서 개발 후 산업체에 기술을 전수하며,
한국전기통신공사, 전자통신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정보를 산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체제
를 구축하여 나가겠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전자통신연구소가 기술개발
을 주도하여 왔으나 통신사업자가 다원화 전문화
되고 자체연구 개발조직을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기초기술 연구 활성화 욕구가
증대되고 민간기업의 연구능력이 급성장하고
있어 연구기관별 기능을 특화하여 연구개발 투자
의 중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 연구기관간에 연구기능을
정립하여

-대학연구소는 기술개발 Seed창출 및 학문적,
원천적 순수기초연구를

-전자통신연구소등 국책연구소는 목적기초 및
기본기술 연구, 교환장비, 전송장비, 이동통신장
비, 위성통신장비등 미래지향적 대형복합 응용
기술 연구, 국가안보통신, 통신망 접속기술,
표준화 기술등 국가소요 및 통신사업자 공통
소요기술 연구를,

-사업자 연구소는 통신망 구성기술, 선로시스템
기술, 뉴미디어기술등 자체사업 수행에 필요한
고유의 응용기술 연구, 시설 및 운용기술, 보전
기술등 사업지원 기반기술 연구를,

-민간 연구소는 제품생산기술을 연구하도록
하고

선로기술연구소, 소프트웨어 기술연구소등
전문분야별 연구소를 설립하여 정보통신기술
선진국진입 기반조성에 힘써 나갈 예정이다.

또한 통신정책 방향설정을 위한 통신분야의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정보통신 발전방향에 관한
전문가그룹 의견을 수렴하며 관·학간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술단체 지원을 강화하여 나가
겠다.

금년에는 지원규모를 25억원으로 늘려('90년
20억원) 사회·인문과학, 이·공학분야 관련
학술단체와 국·공립종합대학교, 정보통신관련학
과 설치대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
다.

2. 통신산업 육성

먼저 대외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국내 통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신공사의 정부출자 배당금 등으
로 정보통신진흥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해에 300억원을 조성한데 이어 금년에도
300억원을 확보하고 정보통신진흥법등 관련규정
을 제정하여 통신기기 및 부품, 통신용 S/W
개발업체, 정보통신사업체 등 정보통신산업 지원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전기통신 설비의 설치, 유지, 보수공사
전문업인 전기통신공사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통신공사업 육성정책을 적극 시행할 예정
이다.

장기적인 육성방향을 보면

-경쟁력과 자생력이 확보되도록 자율적 경쟁기
반을 조성하고

-주기적·정책적 허가시행을 제도화하고 수급대
상을 확대하며

-정보통신, 방송분야등을 독립업종으로 신설하여
전문화하고

-수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등급구조
를 단순화 하는 등 통신기술 발전추세에 적합
한 업종, 등급구조로 개편을 하고 기술능력을
제고하며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금년에는 일반공사업 변경허가('91. 4)와 별중공사업 신규허가('91. 6)를 실시하고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92년부터 허가시행을 상례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현재 45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산 전신자교환기(TDX)의 수출을 추진중이나 수출대상국의 구매자금 부족과 수출실적이 없어 TDX에 대한 국제인식이 낮은 것이 수출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진국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분야임을 감안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의 지원정책을 보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TDX 수출에 우선 지원되도록 추진하고 수출대상국 인사조빙, 기술훈련제공등을 통해 수출환경을 조성하며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수출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 통신용 기기부품 및 소프트웨어 생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능력이 부족하여 통신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체신부, 통신공사, 전자통신연구소 합동으로 유망중소 통신기업을 지원하여 핵심기술의 국산화, 수출상품화에 주력하고 있다.

금년에도 기술개발능력, 경영능력이 건설하여 지원효과가 기대되는 통신용 기기, 부품 및 S/W 업체 중에서 10~15개 업체를 발굴하여 자금지원, 판로알선, 기술지원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시켜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규모가 영세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기술수준이 낮은 전기통신 용역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용역업체중 우수용역업체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통신용역기술의 고도화를 유도하여 나갈 계획이다.

금년에는 보유인력, 장비 및 수주실적과 기술수준을 종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기술평가제도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 성적이 양호한 업체를 우수용역 업체로 선정하여 내년부터 정보통신진흥자금을 활용하여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해외용역시장의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3. 공중통신사업 활성화

우리나라 통신산업 구조는 1단계인 통신사업 독점운영단계('82 이전)와 2단계인 사업별 전문화 육성단계('82~'90)를 거쳐 이제 3단계인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도입 단계에 이르고 있다.

지난 해에 통신사업 구조조정을 시행한데 이어 금년에는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간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여 나갈 계획이다.

먼저 신규 참여자인 데이터통신(주)의 자체 국제통신망 구축을 지원하고 통신설비 제공대가를 감정하여 금년 12월에는 국제전화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제공되게 된다.

그리고 경쟁사업자의 독자적 요금체제를 수립하여 경쟁요금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경쟁의 실질적 효과를 실현하고, 통신망 상호접속제도를 개선하여 상호접속 새부개념을 명확히하여 사업자간 분쟁소지를 사전에 제거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사업자 다원화에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전기통신망의 고도화에 따라 공중전화 작신서비스와 신용통화 서비스등과 같은 고품질의 공중전화 서비스가 출현하고 공중전화기 설치장소의 특성에 따라 공중전화기의 사유화, 고급화 추세에 따라 공중전화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신규서비스 연구개발을 강화하며 관리공중전화기 등의 구매제도개선(사급제 -> 자급제)등을 통해 제품개발의 경쟁을 유도하고 유망 공중전화기 생산업체를 선정하여 지원·육성할 예정이다.

또한 공중통신진단 사업자를 설립('91. 3)하여 공항 유·무선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공항지역 내의 공중통신시스템을 현대화하여 공중통신서비스를 개선한다.

부문에 정박 또는 항해중인 선박과 육지에 있는 해운·항만 관련기관 또는 일반가입자간에 제공되는 통신인 항만통신을 현대화 하기 위해 '91. 12월 부산항만 지역을 연안선박 자동무선전화서비스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범운영 성과를 보고 '94년까지 전국에 확대하여 통신의 발전 혜택을 어민에게도 골고루 분배하고 항만전화(주)의 자립기반과 경영구조도 개선하여 나갈 계획이다.

4. 이용자보호강화 및 제도정비

지난 80년대 통신시설의 양적인 확충에 치중하던 나머지 다소 소홀히 했던 이용자 중심의 통신정책을 시행하여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

먼저 정부의 경제행정규제 완화계획의 일환으로 서비스품질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이용약관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공정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한 사업자의 면책규정을 삭제하며 이해관계인, 소비자보호원, 여론 조사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이용약관을 만들 계획이다.

그리고 통신사업자의 이용자 피해보상기구의 설치운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기준의 제정을 의무화해 나갈 것이다.

전국 단일 요금제도의 단계적 접근과 시내외간 요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시외거리단계를 축소(4단계 → 3단계)하고 통신사업의 환경변화에 부응한 요금규제방식을 도입하여 서비스간 요금경쟁을 유도하며 공동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접속료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사용량과 무관한 요금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등 요금구조의 합리화로 이용계층간 요금부담의 형평성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사업자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신사업자간의 통일회계제도를 정립하여 합리적인 요금정책을 추진하여 나갈 것이다.

즉 통신사업자간 서비스 형태별로 회계정보가 같은 기준하에서 작성될 수 있도록 통일회계기준을 설정하여 합리적인 요금결정을 위한 서비스별 원가계산제도를 정립하고 사업자별, 업종별 회계보고제도를 확립하겠다.

이를 위하여 지난 해에 미국, 일본, 영국, 서독

등 주요 외국의 통신관련 법규, 통신정책과 요금제도등 통신산업 환경을 조사하여 통일회계제도 제정방향을 설정하였다.

이어 금년에는 전기통신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확한 접속료 산정 및 통신산업 무분별 원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통신사업자간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하며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회계처리 기준을 확립할 계획이다.

5. 국제협력 활동강화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전기통신의 개방화 자유화 등 통신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통신관련 국제협력 활동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UR를 통신서비스협상 및 한·미통신회담에 적극 대처하고 각종 국제기구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로 급변하는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나가겠다.

우리나라 통신발전 정도에 상응한 국제활동 전개로 국제사회에서의 아국위상을 제고시키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이 용이하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90. 12월 브뤼셀 각료회의시 협상기한이 금년 초까지 연장된 UR서비스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서비스시장 자유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나갈 계획이다.

개방원칙에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되 시행은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UR 통신협상을 통해 한·미간 통신현안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한다.

서비스 일반협정 및 통신분야 부속서 제정협상과 양허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한 국내 통신산업 육성책을 마련하여 정보통신 기술개발 지원과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육성등에 만전을 기하여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국제전기통신 사용자회의 (USERCOM'91)를 서울에서 개최('91. 5)하여 우리나라 통신발전상의 해외홍보 기회로 활용한다.

또한 매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통신박람회인 TELECOM'91에 참가('91.

10)하여 한국관 설치·운영, 한국의날 행사 개최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TDX, 광통신장비등 첨단장비를 전시·홍보하여 아국 기업의 대외 진출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밖에 ITU(국제전기통신연합) 관리이사회, APT(아·태전기통신 협의체) 임시총회 및 관리위원회, APEC(아·태 각료회의)등 통신관련 국제기구 환동에 적극 참여하여 아국의 입지를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일 통신실무협의회의, 한·이란 통신협력위원회를 통하여 한·일 양국간의 기술이전 문제와 UR 협상대책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한·이란간의 TDX 수출등 양국간 통신협력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통신기술 인력훈련 지원(91, 100명)과 무상기술 용역사업 지원등 개도국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TDX등 통신기기 수출지원 및 선로공사 등 통신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하고 세계 9위권의 통신선진국에 상응한 국제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국제교역의 증대에 따라 통신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소련, 중국, 동구등 북방국가와의 관계개선에 따라 대북방 통신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급증하는 국제통신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북방 통신로의 확보 및 국제전송로의 다원화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동북아지역 무역·통신의 중심적 기능 역할을 강화하여 나갈 예정이다.

6.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제도 및 기반정비

통신기술의 혁신과 서비스 수요의 고도화, 다양화등에 따른 통신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통신사업 구조조정 정책의 효율적 집행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통신사업 경쟁체제에 적합한 법체제로 관계법령을 정비하여 나갈 예정이다.

통신사업별 적정경쟁을 도입하여 사업별로 차등적으로 규제하며 (일반통신사업 : 지정제,

특정통신사업 : 허가제, 부가통신사업 : 등록),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일회계제도의 도입, 통신번호관리제도의 확립, 통신위원회의 설치(사업자간 분쟁조정), 지배적 사업자에게 통신·전화등 보편적서비스제공 의무부여등의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그리고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에 투자·출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용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 서비스 제공 중단시 손해배상기준 강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 신설,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강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한 정보통신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며 정보이용 능력배양등 정보문화 확산의 기반을 구축하는 등 정보통신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진흥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정보통신진흥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 시책을 추진하고
- 정보통신진흥위원회(위원장 : 체신부장관)를 구성·운영하며
- 정보통신진흥사업단을 설립하여 정보통신진흥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 정부 또는 공중통신사업자의 출연금, 통신공사의 정부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금 등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조성하여
- 정보통신기술, 서비스개발과 산업화 지원, 정보통신설비 현대화 사업,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정보문화 확산사업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 정보화의 촉진을 위한 제도정비 수단으로 통신진흥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통신개발연구원의 정책연구기능을 보강하여 나가겠다. 그리고 PC통신·유선방송등 새로운 통신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구내통신선로설비 기술기준을 개정하고, 전기통신공사협회 통신기술훈련원을 통하여 정보통신·방송분야등 첨단통신설비를

시공할 전문기술 인력양성을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4] 결 어

정보통신은 전신,전화등의 통신기술에 컴퓨터,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이는 산업전반의 생산성과 능률성 향상을 위한 핵심부문일 뿐 아니라 고도성장이 예측되는 지식 집약적 첨단기술 산업으로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수수단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등 선진국은 물론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싱가포르, 대만등에서도 정보통신산업을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집중육성하고 있다.

우리의 정보통신 수준을 보면 지난 10년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전화부문은 기본적인 통신수요를 충족하여 '90년말 현재 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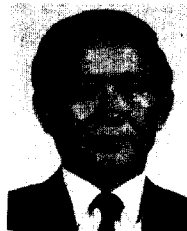
1,500만 회선을 보급해서 전화보급율이 인구 100명당 31대로 중진국 수준을 능가하고 있으며 통신시설 수준은 세계 9위권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통신등 비전화부문은 아직 초보 단계로서 정보의 유통망과 이용기술 기반이 취약하여 산업의 자동화와 전산화 촉진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80년대에 이룬 통신부문의 발전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2000년대에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또한 최근의 급변하는 통신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에 우르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과 한·미통신회담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보통신 시장개방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만큼,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여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李 寅 學

저자약력

- 1936년 3월 5일생
-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62. 8.31~63.12.26 : 체신부 우정국
- 69. 1. 1~69.12. 6 : 광주체신청
- 72. 2. 6~76. 8. 9 : 체신부 전무국
- 76. 8. 9~78. 5.11 : 강릉전신전화국장
- 82. 1. 1~83. 8.17 : 체신부 통신정책국 통신기획과장
- 83. 8.17~84. 7. 5 : 체신부 총무과장
- 84. 7. 5~87. 8. 1 : 강원체신청장
- 87. 8. 1~88. 8.17 : 중앙전파관리소장
- 88. 8.17~90. 4.12 : 부산체신청장
- 90. 4.12~현재 : 체신부 통신정책국장